

---

# 주요국 예산안 - 영국

## [Budget 2021]

---

2021. 4.

동 보고서는 2021년 3월 3일에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발표한  
2021 예산안(*Budget 2021*)과 예산책임청(OBR)이 발표한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연구책임자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경호 경제재정분석팀장

## 공동연구원

한혜란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b>1. 경제 및 재정전망</b>	<b>1</b>
가. 경제전망 .....	1
나. 재정전망 .....	2
<b>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b> .....	<b>5</b>
<b>3. 예산안 주요 내용</b> .....	<b>6</b>
가.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	6
나. 2021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 .....	11
<b>4. 주요 재정정책</b> .....	<b>21</b>
가. 예산안의 중기 경제·재정 전략 .....	21
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23
다. 재정준칙 .....	26

## 영국 개황1)

□ FY2021-22 : 2021년 4월 ~ 2022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HM Treasury, *Budget Speech 2021*, 2021.3.3.

HM Treasury, *Budget 2021: What you need to know*, 2021.3.3.

HM Treasury, *Budget 2021 sets path for recovery*, 2021.3.3.

HM Treasury, *Budget Speech 2021(Oral statement to Parliament)*, 2021.3.3.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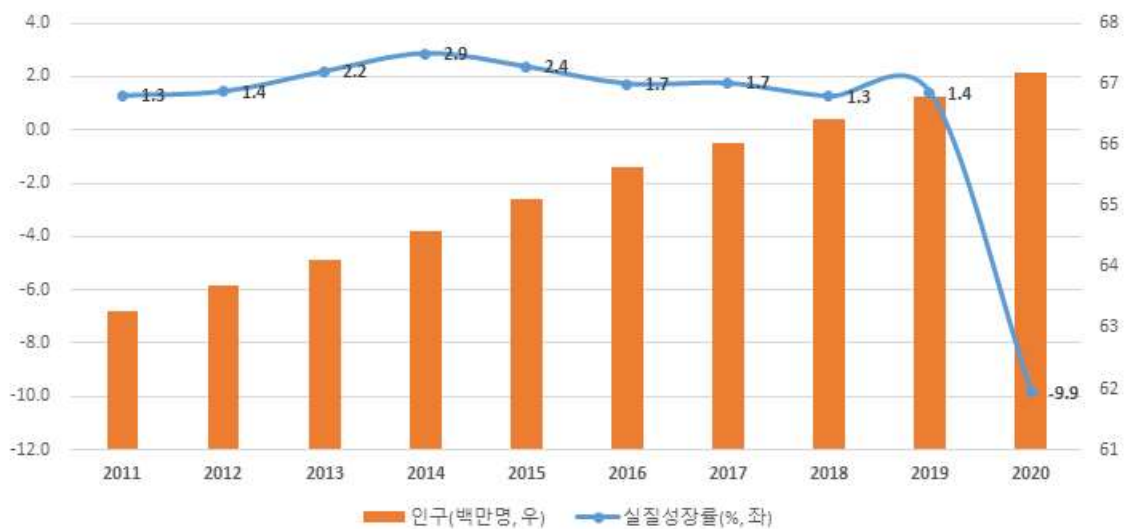
□ 환율 : 1파운드 = 약 1,513.05원(2020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20년 경상 GDP 2조 9,501억 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20년 기준 54.6%(한국 77.0%(2019년 잠정치 기준))

□ 인구 : 6,720만명(2020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자료 : OECD.Stat, 2021.3.29. 추출(<https://stats.oecd.org/>)

1)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1.3.29. 추출, <https://ecos.bok.or.kr/>) 기준;  
경제규모, 수출입의 대GDP 비율, 인구, GDP는 OECD Stat(2021.3.29.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요 약>

- 경제·재정전망
  - (경제전망)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정부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영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2021년 GDP 성장률은 4%로 전망)
  - (재정전망) FY2021-22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10.3%로 전년 대비 하락,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107.4%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
- (예산기조) 재정정책은 전망기간 동안 부양적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며, 이번 예산안의 추가 조치도 FY2022-23까지 경제를 계속 부양할 예정
- (수입·지출) FY2021-22의 경상수입은 전년보다 330억파운드 증가한 8,193억파운드(GDP의 36.2%),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876억파운드 감소한 1조 533억 파운드(GDP의 46.5%)로 전망
- (정책 방향) 2021 예산안은 ①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②공공재정 강화, ③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둠
-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
  - (일자리 및 생계 보호) 고용유지보조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특정 부문의 조세 감면 등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 연장 및 대출, 보조금 등 신규 지원 도입, 백신 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추가 투자 등
  - (공공재정 강화) 경제 회복이 견고하게 진행된다면 재정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여 법인세율 인상(2023년 4월),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 동결(2022-23년~2025-26년) 등을 추진 예정
  -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신규 투자 공제제도, 인프라 은행 등 민간 투자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와 혁신·R&D 기업 스케일업 지원,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 녹색 산업 투자, 자유무역항 개설 등
    - 또한 새로운 성장 계획(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으로 역량, 인프라, 혁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
2020.2.12.	FY2019-20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3.11.	2020 예산안(Budget 2020) 발표	
2020.3.11.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0년 3월) 발표	
2020.5.4.	FY2020-21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2020.7.8.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창출·보호 계획(A Plan for Jobs 2020) 발표	2020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0.7.14.	예산책임청(OBR), 2020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2020.7.21.	FY2018-19 결산보고서 발표	
2020.9.24.	일자리 보호와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 계획(겨울 경제 계획(Winter Economy Plan)) 발표	
2020.11.18.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발표	
2020.11.25.	2020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2020) 발표	2021년 3월 재정동향
2021.2.22	FY2020-21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1.3.3.	2021 예산안(Budget 2021) 발표	
2021.3.3.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1년 3월) 발표	

영국 재무부는 당초 2020년 가을로 예정되었던 예산안 발표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하여 2021년 3월 3일에 Budget 2021을 발표함  
 이하 내용은 재무부의 예산안(Budget 2021)과 예산책임청의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 1. 경제 및 재정전망<sup>2)</sup>

### 가. 경제전망

<표 1> 주요 경제전망

(단위 : %,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성장률	1.4	-9.9	4.0	7.3	1.7	1.6	1.7
(20년11월 전망대비 변화%p)	0.2	1.4	-1.5	0.7	-0.6	-0.1	0.0
- 가계소비	1.1	-11.0	2.9	11.1	1.2	1.8	1.3
- 일반정부소비	4.0	-5.7	12.0	1.4	0.8	2.3	2.1
- 기업투자	1.1	-10.7	-2.2	16.6	3.0	-2.3	5.1
- 일반정부투자	4.0	3.8	17.8	4.2	1.9	1.4	1.2
- 순수출 <sup>1)</sup>	-0.1	0.7	-3.6	-0.4	0.3	0.0	-0.1
소비자물가(CPI)상승률	1.8	0.9	1.5	1.8	1.9	1.9	2.0
고용(백만명)	32.8	32.7	32.3	32.4	32.8	33.1	33.2
평균 임금 상승률	3.0	1.1	1.9	2.7	2.2	2.8	3.5
실업률(LFS)(%)	3.8	4.5	5.6	5.9	5.1	4.5	4.4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1.1; Table 2.11에서 일부 발췌.

- (경제성장률 전망) 예산책임청(OBR)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정부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표 1> 참고)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국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2020년 연간 GDP 성장률은 -9.9%로 30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가 나타남
  - 2021년 영국의 GDP는 4%의 성장이 예상되며 백신 공급과 공공 보건 제한 조치 완화로 2020년 11월 전망의 예상 시점보다 6개월 이른 2022년 2분기에 팬데

2) 출처: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봉쇄 기간 동안 축적된 가계 저축이 줄어들며 소비가 반등
- 브렉시트 결과의 불확실성 완화, 중기 전망에 대한 신뢰(confidence) 상승, 예산안의 자본 공제 한시적 확대 조치 등은 기업 투자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
-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보호, 기업 지원, 생산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OBR의 11월 전망 이후 발표된 조치들과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치들은 2021년 봄과 여름에 GDP를 약 0.75% 제고할 전망

□ (실업률 전망) 2021년 실업률은 전년(4.5%)보다 상승한 5.6%로 전망되며 특히 2021년 말 6.5%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유지보조금제도 연장 등에 힘입어 2020년 11월 전망에서 예상한 최고 실업률 수준(7.5%)보다는 낮은 수준임
- 이후 실업률은 전망기간 동안 점차 하락하여 2024년 말 4.4%를 기록할 전망

□ (물가상승률 전망) 2021년과 2022년 CPI 인플레이션은 각각 1.5%, 1.8%로 통화정책위원회(MPC)의 2% 목표치를 다소 하회할 전망이다

- 실업률 증가로 인한 임금 상승세 둔화의 영향이 유가 상승의 영향보다 우세

□ (주요 리스크) 팬데믹과 경제의 향후 추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효과가 높은 백신의 빠른 공급, 신규 치료법 개발, 누적 가계 저축의 감소 속도 증가 등은 경제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반면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중·단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 경제 재개 및 긴급 재정지원 종료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은 FY2020-21에 16.9%에서 FY2021-22에 10.3%로 하락할 전망이나 이는 여전히 금융위기 시기보다 높은 수준임([그림 1] 참고)
  - 코로나19로 인해 FY2020-21의 정부 차입은 3,550억파운드로 기록적인 규모로 나타났으나 이는 2020년 11월 전망치보다는 390억파운드 낮은 수준임
  - FY2021-22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연장, 기업 투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세 지원 정책으로 이후 정부 차입은 2020년 11월 전망치보다 더욱 서서히 감소할 전망
- (경상예산수지) 예산책임청은 GDP 대비 경상예산 적자(Public sector current budget deficit)가 전망기간 동안 하락하여 전망기간 마지막 연도(FY2025-26)에 거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표 2> 참고)
  - GDP 대비 경상예산적자 비율은 FY2020-21에 13.3%, FY2021-22에 7.6%로 예상
  - 이후 경상예산적자 비율이 FY2023-24에 0.6%, FY2025-26에 0%에 근접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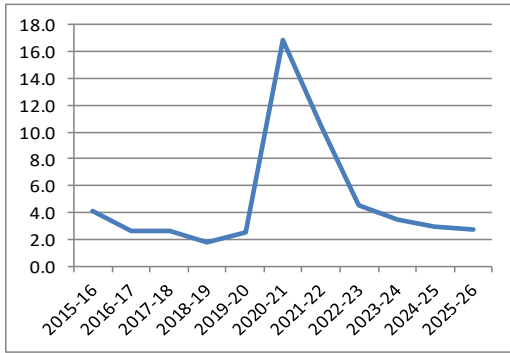
#### □ 국가채무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 FY2021-22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 비율은 107.4%로 전년(100.2%) 대비 상승할 전망([그림 2] 참고)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3-24에 109.7%까지 증가하여 FY1958-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후에는 기초 채무<sup>3)</sup> 감소와 중앙은행 TFS<sup>4)</sup>의 대출 상황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기초 채무 비율은 FY2023-24에 97.1%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이나 예산안에서 제시된 재정 복원을 위한 조치에 힘입어 전망기간 마지막 2개 연도에는 하락할 전망
  - 전망기간의 채무 증가(현금 기준)는 대부분은 순차입 증가에서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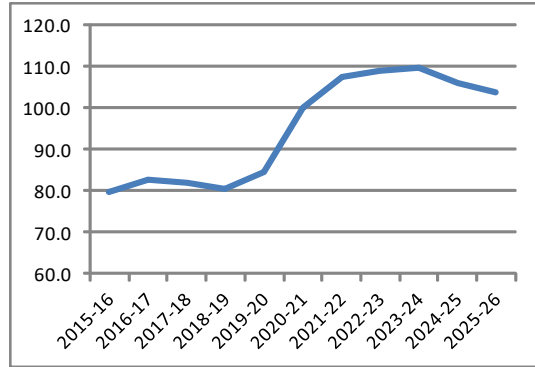
3) underlying debt (excluding the Bank of England)

4) Term Funding Scheme: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그림 1]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그림 2] 공공부문 순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Chart 1.10; Chart 3.8* 일부 수정

<표 2> 주요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b>세입·세출</b>							
공공부문 경상수입	37.2	37.5	36.2	37.3	38.4	39.0	39.1
총관리지출(TME)	39.8	54.4	46.5	41.8	41.9	41.9	41.9
공공부문 경상지출	35.6	48.2	41.3	36.5	36.5	36.6	36.6
공공부문 순투자	1.9	3.6	2.7	2.8	2.9	2.8	2.7
감가상각	2.3	2.6	2.5	2.5	2.5	2.5	2.5
<b>2020 예산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b>							
경상예산적자	0.6	13.3	7.6	1.7	0.6	0.1	0.0
공공부문순투자	1.9	3.6	2.7	2.8	2.9	2.8	2.7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3.5	2.6	2.5	2.3	2.4	2.5	2.5
<b>기존에 법제화된 재정 목표</b>							
공공부문 순차입	2.6	16.9	10.3	4.5	3.5	2.9	2.8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	2.6	16.5	9.7	4.2	3.3	2.8	2.7
공공부문 순채무 <sup>1)</sup>	84.4	100.2	107.4	109.0	109.7	106.2	103.8
<b>안정성장협약(SGP) 기준</b>							
일반정부 적자 <sup>2)</sup>	2.8	17.1	10.6	4.5	3.5	3.1	3.1
경기조정 재정적자	2.9	16.6	10.0	4.2	3.4	3.0	3.0
일반정부 채무 <sup>3)</sup>	84.4	107.6	107.2	107.8	109.3	110.0	110.4

주: 1) 3월 말 기준 채무,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2) 일반정부 순차입(마스트리히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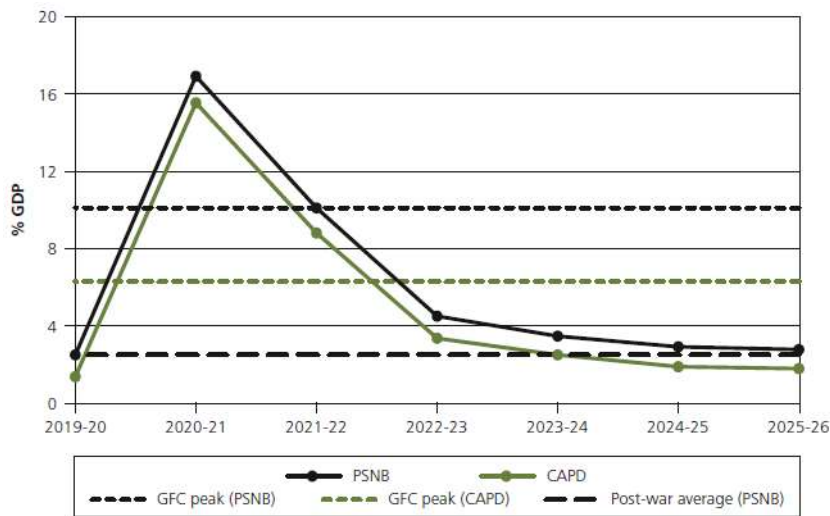
3) 일반정부 총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 회계연도 GDP 사용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1.2; Table 3.34*에서 일부 발췌

##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 (재정기조) 재정정책은 전망기간<sup>5)</sup> 동안 부양적(supportive) 기조가 유지될 전망<sup>6)</sup>
  -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순차입(PSNB)과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CAPD)로 재정기조를 측정([그림 3] 참고) 시, 특히 FY2020-21과 FY2021-22에 금융위기보다 더 부양적인 모습을 보이며 재정정책이 GDP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함
  - 이후 공공부문 순차입이 하락하지만 여전히 전쟁 이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그림 3] 재정 기조(fiscal stance)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Chart 1.4.

- 2020 예산을 포함해 현 정부가 발표한 정책 조치는 전반적으로 FY2023-24까지 상당히 부양적(materially supportive)이며, 이번 예산안의 추가 조치도 FY2022-23까지 경제를 계속 부양한다는 설명임
-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유지 보조금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 제도 연장, 기타 한시적 조세 감면 연장, 자본공제 인상 등 예산안에서 FY2021-22에 재정정책 확대(loosen)를 위한 약 600억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발표함<sup>7)</sup>
- 또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소득세 기본공제액 동결, 부처별 경상지출 한도 하

5) FY2020-21 ~ FY2025-26

6) *fiscal policy remains supportive across the forecast.*(HM Treasury, *Budget 2021*, 2021., p.17)

7) *In the Budget,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loosen fiscal policy by almost £60 billion in 2021-22.*(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 p.38)

향 조정 등 FY2023-24부터 재정정책 축소(tighten)를 위한 계획도 발표<sup>8)</sup>

- (정책 방향)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은 2021 예산안에서 ①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②공공재정 강화, ③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둔 650억파운드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함

※ 각 정책 방향별 세부 정책은 '3. 예산안 주요 내용'에 제시됨

-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경제 재개 계획을 반영해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연장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백신 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투자
- (공공재정 강화)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 일자리, 국민의 생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경제 회복이 견고하게 (durably) 진행된다면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영국 전역에서의 투자와 기회를 확산시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역량, 자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
- 이처럼 경제 보호, 회복 지원, 공공재정 복원을 위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영국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며, 대외 지향적·저탄소·하이테크 경제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로를 추구

### 3. 예산안 주요 내용

#### 가.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 1) 수입 전망

- FY2021-22의 공공부문 경상수입(Public Sector Current Receipts)은 8,193억파운드 로 전년보다 4.2%(330억파운드)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는 FY2019-20의 규모를 하회하는 수준임(<표 3> 참고)

8) From 2023-24, the Government plans to tighten fiscal policy by increasing the corporation tax rate, freezing the income tax personal allowance and higher-rate threshold, and lowering day-to-day departmental spending limits.(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 p.38)

- 경상수입 증가가 GDP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FY2021-22의 GDP 대비 공공부문 경상수입 비율은 전년(37.5%) 대비 감소한 36.2%로 예상됨
  - 주로 한시적 자본 공제 도입,接客업 부문 VAT 감면 연장, 비주거용 재산세율(소매·接客업 등)과 부동산 거래 인지세 감면 연장 등의 비용이 반영됨
- 세목별 규모는 FY2021-22에 소득세 약 1,980억파운드(24.1%), 부가가치세 약 1,510억파운드(18.4%), 국가보험기여금 약 1,470억파운드(17.9%), 소비세 약 480억파운드(5.9%), 법인세 약 400억파운드(4.9%) 등으로 전망됨([그림 4] 참고)

[그림 4] FY2021-22 공공부문 경상수입



주: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Chart 2 를 참고하여 작성

- 한시적 조세 인하 조치의 종료, 법인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FY2022-23부터 경상수입이 GDP 증가보다 빠르게 늘어나 FY2025-26의 GDP 대비 경상수입 비율은 39.1%로 FY1984-85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표 3> 경상수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소득세	193.6	194.8	198.2	208.7	220.0	233.2	248.2
국민보험기여금(NICs)	145.0	143.8	146.8	152.6	157.4	163.6	170.2
부가가치세	133.8	119.9	127.9	145.6	149.7	155.1	159.2
법인세	48.4	45.5	40.3	48.8	71.3	81.7	85.3
석유세	-0.4	-0.3	-0.2	-0.2	-0.2	-0.2	-0.2
연료세	27.6	21.5	26.0	29.2	30.1	30.6	31.2
비주거용 재산세	31.0	18.1	23.8	31.6	33.8	34.5	35.0
지방세(Council tax)	36.3	38.1	39.9	41.2	42.6	44.1	45.6
VAT 환급(refunds)	19.0	21.5	22.8	22.7	23.7	24.8	26.2
자본이득세	9.8	10.1	8.7	10.7	12.2	13.2	14.4
상속세	5.1	5.2	6.0	5.8	5.7	6.1	6.6
부동산취득세	12.5	9.6	12.3	14.5	15.1	16.2	17.3
주식취득세	3.6	3.5	3.4	3.3	3.4	3.6	3.7
담배세	9.7	9.0	9.6	9.4	9.3	9.1	9.1
주세	11.5	12.7	12.4	12.7	13.1	13.8	14.3
항공여객세	3.7	0.6	1.3	2.0	3.1	4.3	4.4
보험료세	6.5	6.3	6.5	6.7	6.8	6.9	7.1
기후변화세	2.1	1.7	2.1	2.2	2.3	2.3	2.4
은행세(Bank levy)	2.5	1.9	1.0	1.0	1.0	1.0	1.0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	1.5	1.2	1.2	1.3	1.3	1.4	1.4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2.8	2.9	2.9	3.0	3.1	3.2	3.4
청량음료산업세(설탕세)	0.3	0.3	0.3	0.3	0.3	0.3	0.3
디지털서비스세	0.0	0.3	0.4	0.5	0.6	0.7	0.7
기타 국세(HMRC taxes)	7.3	6.7	7.0	7.5	7.6	7.7	7.9
자동차소비세	6.8	6.9	7.0	7.1	7.2	7.3	7.5
면허료 수입	3.3	3.8	3.8	3.8	3.9	3.9	3.9
환경부담금	8.0	9.5	10.2	10.0	10.6	10.8	11.2
EU ETS 경매세	1.6	1.1	1.3	1.2	1.2	1.2	1.3
기타 조세	10.2	8.0	8.8	9.5	9.8	9.7	9.8
<b>국민계정 조세수입</b>	<b>743.0</b>	<b>704.2</b>	<b>731.6</b>	<b>792.8</b>	<b>846.1</b>	<b>890.0</b>	<b>928.2</b>
EU 부담금 공제	-3.2	-2.1	-	-	-	-	-
이자 및 배당	26.5	23.5	25.1	26.4	28.4	30.8	33.3
총운영수지	57.0	56.5	58.7	62.2	66.2	69.6	72.5
기타수입	4.8	4.1	3.9	4.0	4.0	3.7	3.9
<b>총 경상수입</b>	<b>828.2</b>	<b>786.3</b>	<b>819.3</b>	<b>885.4</b>	<b>944.7</b>	<b>994.2</b>	<b>1,037.8</b>
(GDP 대비 %)	(37.2)	(37.5)	(36.2)	(37.3)	(38.4)	(39.0)	(39.1)
2020년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11.2	-86.6	-91.4	-63.8	-39.9	-2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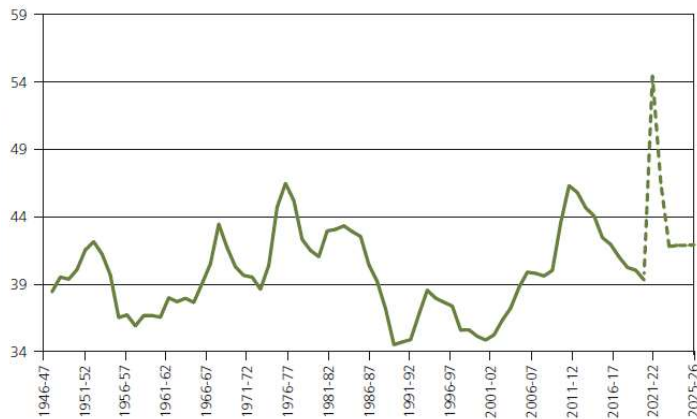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3.2; Table 3.4; Table 3.5.

## 2) 지출 전망

- (총관리지출) GDP 대비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비율은 FY2020-21에 54.4%로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코로나19 관련 지출 감소와 GDP 회복에 따라 급등세가 완화되어 FY2021-22에 46.5%, FY2022-23에 41.8%로 하락할 전망([그림 5] 참고)

\* FY2020-21 ~ FY2025-26 기간 총관리지출의 연간 실질증가율은 약 1.5%로 전망됨

[그림 5]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 추이



주: 실선은 실적치, 점선은 전망치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Chart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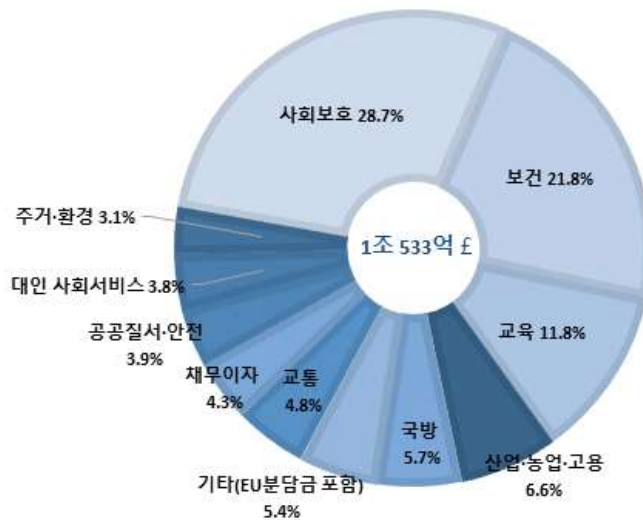
- FY2020-21의 총관리지출은 부처별 자원 지출(특히 보건 관련) 및 복지 지출의 대규모 증가와 바이러스 관련 지원 도입으로 전년 대비 약 2,560억파운드(29%)의 기록적 증가가 나타남
- FY2021-22의 총관리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76억파운드 감소한 1조 533억파운드(GDP의 46.5%)로 전망됨(<표 4> 참고)
  - 이는 2020년 3월 전망치보다 759억파운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추가 부처별 지출(2020 지출 검토 반영), 2021 예산안의 고용유지보조금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 연장과 신규 회복 대출 도입 등으로 인한 상승과 채무 이자 감소 등 하향 요인을 반영
  - FY2021-22 공공부문 경상지출은 전년보다 771억파운드 감소한 1조 116억파운드, 공공부문 총투자는 106억파운드 감소한 1,294억 파운드를 기록할 전망
  - FY2021-22의 기능별 총관리지출 규모는 사회보호(약 3,020억파운드, 28.7%),

9)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 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Public sector current expenditure : PSCE)과 공공부문 총투자(Public sector gross investment : PSGI)로 구성

보건(약 2,300억파운드, 21.8%), 교육(약 1,240억파운드, 11.8%)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그림 6] 참고)

- 전년 예산안 대비 보건(19.2→21.8%)과 산업·농업·고용(3.2→6.6%)의 비중 상승

[그림 6] FY2021-22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총관리지출 기준)



주: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Chart 1을 참고하여 작성

<표 4> 예산안의 총관리지출(TME) 계획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b>공공부문 경상지출</b>	790.8	1,011.6	934.5	866.3	898.2	933.1	971.7
자원 AME(Resource AME)	410.0	459.9	430.0	420.6	434.2	449.9	468.1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sup>1)</sup>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345.2	503.3	453.0	393.4	409.6	426.7	445.0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343.0	362.7	385.0	393.4	409.6	426.7	445.0
코로나19 관련 자금	2.2	140.6	68.0	-	-	-	-
감가상각 (Ring-fenced depreciation)	35.6	48.5	51.5	52.3	54.4	56.4	58.6
<b>공공부문 총투자</b>	94.4	129.4	118.8	126.1	131.8	135.6	139.8
자본 AME(Capital AME)	24.0	29.2	18.4	18.8	22.7	22.7	22.5
자본 DEL(Capital DEL)	70.4	100.2	100.4	107.3	109.1	112.8	117.4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자본 DEL	70.4	91.6	99.8	107.3	109.1	112.8	117.4
코로나19 관련 자금	0.0	8.6	0.6	-	-	-	-
<b>총관리지출</b> (GDP 대비 %)	885.2 (39.8)	1,140.9 (54.4)	1,053.3 (46.5)	992.3 (41.8)	1,030.1 (41.9)	1,068.7 (41.9)	1,111.5 (41.9)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총 DEL	413.4	454.3	484.8	500.7	518.8	539.6	562.3

주: 1) 감가상각(Ring-fenced depreciation)을 제외한 자원 DEL은 자원 예산 내에서 재무부가 통제하는 대상임. 자본 DEL은 자본 예산 내에서 재무부가 통제하는 대상임.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Table 1.9에서 일부 발췌.

## 나. 2021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

- 재무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①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②공공재정 강화, ③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둔 계획을 발표함
  - 2021 예산안에서 제시된 FY2020-21과 FY2021-22에 대한 추가 지원의 규모는 약 650억파운드 수준임
    - \* 2020 예산에서 발표한 조치를 포함해 FY2020-21과 FY2021-22의 지원 금액 합계는 4,070억파운드로 추계
  - (정책 결정의 재정적 영향) 2021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이 재정(공공부문 순차입(PSNB))에 미치는 영향은 FY2021-22에 588억 6,500만파운드로 추계됨
    -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 중 FY2026-26까지 공공부문 순차입(PSNB)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비용 및 수입은 <표 5>과 같음
    - FY2021-22에 주요 지출 정책 결정은 347억 7천만파운드 지출 확대, 조세 정책 결정은 240억 9,500만파운드 세입 감소 효과가 예상됨

<표 5> 2021 예산안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b>일자리 및 생계 보호</b>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보조금 연장('21.9.까지)	지출	0	-6,945	0	0	0	0
자영업자 소득지원 연장	지출	-55	-12,760	+1,650	0	0	0
Restart Grant 및 기타 추가 제한조치 보조금	지출	0	-5,005	0	0	0	0
비주거용 재산세의 100% 감면(3개월) 및 한도 내 66% 감면(9개월)	조세	+135	-6,835	+135	-35	0	0
접객, 숙박 등에 대한 VAT 일부 감면 연장('21.9.30.까지 5%, '22.3.31.까지 12.5%)	조세	0	-4,720	0	0	0	0
신규 납부제도를 통한 이연 VAT 분할 납부	조세	-80	0	0	0	0	0
부동산 거래 인지세 비과세 구간 유지('21.6.30.까지 £50만, '22.3.31.까지 £25만)	조세	-255	-1,350	*	*	-5	0
연료세 동결(2021-22년)	조세	0	-795	-885	-910	-925	-945
주세 동결(2021-22년)	조세	-45	-315	-320	-325	-340	-350
청년(16-24세) 연수생 지원 확대	지출	0	-100	-50	0	0	0
통합급여의 표준수당 인상(£20) 6개월 연장	지출	0	-2,240	0	0	0	0
근로세액공제 수급자 보조금(£500)	지출	0	-765	-20	0	0	0
통합급여의 최소소득기준 재도입 3개월 연기	지출	0	-25	-60	-5	0	0
통합급여 초과소득기준(£2,500) 추가 1년 동결	지출	0	-110	0	0	0	0
통합급여/주택수당의 Shared Accommodation	지출	0	-10	-10	-5	0	0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Rate 적용 면제(일부 대상) 조기 도입							
법정병기수당 환급 제도 연장	지출	0	-35	0	0	0	0
코로나19: 국세청 감면	조세	0	-105	-5	*	*	*
<b>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b>							
신규 장비 투자 시 130% 자본 공제	조세	-1,735	-12,255	-12,695	-2,395	+2,090	+2,780
결손금 소급 공제 3년 연장(£200만 이내)	조세	-840	-205	+580	+325	+160	+80
중소기업에 신규 경영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출	0	-60	-75	-85	0	0
중소기업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지출	0	-50	-115	-130	0	0
<b>공공재정 강화</b>							
법인세율 인상('23.4.부터)	조세	-5	+20	+2,390	+11,900	+16,250	+17,200
2021-22년 수준으로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 유지(~2025-26년)	조세	0	*	+1,555	+3,655	+5,790	+8,180
VAT 등록 기준(£85,000)유지(~2023-24년)	조세	0	0	+55	+125	+135	+165
상속세 비과세 한도 2020-21년 수준 유지(~2025-26년)	조세	0	+15	+70	+165	+290	+445
연금저축 평생공제액 현 수준 유지(~2025-26년)	조세	-10	+80	+150	+215	+255	+300
자본이득세 연간 면제금액(£12,300) 유지(~2025-26년)	조세	0	*	+5	+10	+20	+30
<b>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시스템</b>							
북아일랜드 주택행정부 법인세 면제	조세	0	-20	-10	-10	-10	-10
EU 이자-로열티 지침 폐지	조세	0	+10	+10	+10	+5	0
Red Diesel <sup>10)</sup> 사용 제한의 추가 예외	조세	0	0	-80	-85	-100	-110
대형 화물차 소비세 동결(2021-22년)	조세	0	-5	-5	-5	-5	-5
대형 화물차 도로 이용세 추가 12개월 유예('21.8.부터) 및 세율 동결	조세	0	-140	-75	-5	-5	-5
탄소가격지원(CFS): 2022-23년 세율 동결	조세	0	0	-5	-10	-10	-5
플래세 동결(2021-22년)	조세	0	-10	-15	-15	-15	-15
체납·환급 이자 조정/조세 패널티 개혁	조세	0	0	+5	+90	+155	+155
VAT: 매출 관련 전자 기록 위조에 대응	조세	*	+5	+20	+20	+20	+20
OECD 의무보고 규정	조세	0	0	*	+5	+5	+5
국세청: 납세 순응을 위한 투자	조세	-55	-500	-460	+110	+750	+1,310
국세청: 디지털 인프라 투자	지출	0	-30	-25	-15	-5	*
노동연금부: 납세 순응을 위한 투자	지출	0	-10	+190	+235	+250	+250
<b>금융 거래</b>							
금융거래 및 보증 변화의 공공부문순차입 영향	지출	-2,690	-945	+280	+365	+410	+435
<b>기존에 발표된 정책</b>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보조금 연장('21.4.까지)	지출	0	-2,665	0	0	0	0
R&D PAYE Cap: 업데이트	지출	0	*	-20	-80	-105	-115
비주거용 재산세: 공제 제도 변화	조세	-160	-30	0	0	0	0
영국 배출권 거래제도	조세	0	+15	+50	+35	+15	0
VAT: Tour Operators Margin Scheme <sup>11)</sup>	조세	-5	-30	-45	-70	-100	-105
VAT: 중고차 마진 과세 폐지 취소	조세	*	-5	-5	-5	-5	-5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VAT: VAT (Treatment of Transactions) Order 1992 폐지	조세	0	+5	+15	+15	+15	+15
신고 납부 제도: 패널티 완화	조세	-105	+100	*	*	*	0
코로나19: 자전거 통근 관련 조세 감면 제도의 조건 완화	조세	-5	*	0	0	0	0
국세청: 조세채무 추적을 위한 추가 자원	조세	-55	*	0	0	0	0
사회보장 조정 관련 영국EU 미래 관계 협정	지출	*	*	+5	+5	+5	+5
자본화 지침(capitalisation direction) <sup>12)</sup> 을 통한 지역 당국에 대한 예외적 지원	지출	-60	-55	+30	+30	+30	+30
<b>정책 결정 합계</b>	-	<b>-6,010</b>	<b>-58,865</b>	<b>-7,785</b>	<b>+13,105</b>	<b>+25,025</b>	<b>+29,735</b>
지출 정책 결정 합계	-	-2,765	-34,770	+215	+345	+720	+875
조세 정책 결정 합계	-	-3,245	-24,095	-8,005	+12,760	+24,305	+28,860
[메모] 자원 DEL: OBR의 최근 디플레이터 (2.1%)를 반영한 실질 증가율 가정 유지	-	0	0	+3,975	+3,520	+3,875	+4,160

- 주: 1) 추계는 OBR의 최근 경제·재정 결정 요인을 반영  
 2) 조세와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조세 정책과 지출 정책을 구분  
 3)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4) 조세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Table 2.1. 재인용.

### 1)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2021 예산안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를 반영한 경제적 지원 연장 방안을 제시함

- 일자리 보호와 생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우선순위임

생계 지원

- (소득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유지보조금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 연장
  -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보조금을 2021년 9월까지 5개월 추가 연장
  - 근로자는 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현재 급여의 80%를

10) 레드 디젤(red diesel)은 도로용 차량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를 지칭함

11) 여행, 숙박 등을 매입 및 재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Tour Operators Margin Scheme를 활용하여 VAT를 계산함

12) 정부가 예외적으로 지방 당국이 수익 비용(revenue cost)을 자본 비용(capital cost)처럼 처리하는 것을 허용

받을 수 있음

- 고용주는 4~6월 기간에 국가보험료 및 연금 분담금만 부담하고 경제가 재개되면 7월 10%, 8월과 9월에 20%씩 임금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
  -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를 연장해 4차 및 5차 보조금을 지급
    - (4차 보조금(2~4월)) 소득 보조 비율 80%(3개월 최대 7,500파운드)를 적용하며, 2019-20년의 신규 자영업자(약 60만명)도 보조금 수급이 가능해짐
    - (5차 보조금(5~9월)) 매출(turnover)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3개월 평균 이익(trading profit)의 80%(최대 7,500파운드), 30% 미만 감소한 경우 30% (최대 2,850파운드)를 지원
  - (복지) 통합 급여(Universal Credit) 표준 수당(Standard Allowance)의 한시적 인상(주당 20파운드) 적용을 6개월 연장하고,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청구자에게 6개월 추가 지원을 위한 일회성 보조금(500파운드)을 지급
  - 또한 자영업자 통합급여 수급자에 대한 한시적인 최소소득기준<sup>13)</sup> 적용 중단을 7월 말까지 추가 연장
  - (주거) 2021년 4월에 신규 모기지 보증제도를 도입해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부동산 거래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인하 조치를 연장해 주택 시장 지원
    - 5%의 보증금으로 최대 60만파운드(주택 가격)의 모기지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모기지 보증제도 도입(2022년 12월까지 한시적 조치)
    - 부동산 거래 인지세 비과세 구간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연장
      - 비과세 구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 50만파운드, 2021년 9월 30일까지 25만 파운드로 확대 적용한 후 2021년 10월 1일부터 종전 125,000파운드로 축소
-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 계획(Plan for Jobs<sup>14)</sup>)의 일환으로 연수생 및 견습생에 대한 지원 확대

13) 자영업자의 수입이 최소소득기준(Minimum Income Floor) 이상이면 실제 소득을, 미만이면 최소소득기준을 바탕으로 통합급여액을 계산함. 최소소득기준은 동일 연령대가 받는 최저임금에 근로 가능시간을 곱하여 계산됨.

14) 정부는 2020년 7월에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창출·보호 계획(A Plan for Jobs 2020)을 발표한 바 있음

- (연수생(traineeship) 지원) 1억 2,600만파운드의 신규 자금을 통해 2021-22년에 16-24세 청년(추가 4만명)에게 양질의 현장 실습(work placement) 및 훈련을 지원
  - 또한 연수생에게 현장 실습(work experience)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인당 1,000파운드의 자금 지원
- (견습직(apprenticeship) 신규 고용 지원금 연장·인상)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견습생 신규 고용 시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인상(1,500→3,000파운드/인)
- (신규 “flexi-job” 견습제도) 2021년 7월부터 7백만파운드의 자금을 도입하여 서로 다른 고용주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창작 산업 등) 시에도 견습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장기 훈련을 제공

□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지원

- (코로나19 백신 보급) 잉글랜드의 백신 보급을 위해 2021-22년에 16억 5천만파운드의 자금 할당
- (학습 부진 해결)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10억 파운드 규모의 catch-up 패키지에 이어 7억파운드의 추가 자금을 마련
  - 초·중등학교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Recovery Premium), 개인 교습 프로그램 확대, 조기 언어교육 지원 등
- 이 외에도 군인 자선 단체의 디지털 및 데이터 전략개발 지원, 재향 군인 정신 건강 지원, 가정 학대 해결 등을 위한 지원 계획 발표

□ 기업 및 산업 지원

- (신규 회복 대출(Recovery Loan Scheme)) 2021년 4월 6일부터 기존 정부 대출 보증 제도<sup>15)</sup>를 대체하는 신규 회복 대출 제도 도입
  -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기관에 2만 5천~1천만파운드의 대출에 대한 80%의 정부 보증 제공

---

15) 기존 정부 대출 보증제도는 2021년 3월 말 종료 예정이며 현재(예산안 발표일)까지 약 730억 파운드의 대출을 지원함

- (50억 파운드의 신규 기업 보조금(Restart Grant))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비필수 소매업에 최대 6천파운드, 접객, 숙박, 레저, 퍼스널 케어, 헬스장 등 사업장에 최대 18,000파운드의 보조금 지원
  - 또한 지역 당국이 재량적으로 관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4억 2,500만파운드의 추가 자금 지원
- (비주거용 재산세(business rates) 감면 연장) 소매, 접객, 레저 사업장 대한 비주거용 재산세 감면을 추가 연장하여 4월~6월은 100% 감면, 7월~내년 3월은 66%<sup>16)</sup> 감면을 적용
  - 잉글랜드 내 75만개의 소매, 접객, 레저 사업장이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조세 감면으로 인한 지역 당국의 세수 손실은 정부가 보전
- (VAT 감면 연장) 관광·접객 부문의 15만개 사업체와 240만개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동 부문에서 공급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VAT 세율 감면 조치를 추가로 연장
  - 해당 부문의 VAT 세율을 9월 말까지 5%, 이후 6개월 간 12.5%로 적용
    - \* 일반 VAT 세율은 20%임
- 기타 산업 지원
  - 공항·지상 운영 지원 프로그램<sup>17)</sup> 6개월 추가 운영(최대 4백만파운드)
  - 문화 회복 기금 지원 연장, 영화·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연장, 스포츠 회복 기금 등 예술·문화·스포츠 기관 지원에 7억파운드 자금 지원 등
- 이 외에도 신규 납부제도를 통한 이연 VAT 분할 납부, 중소기업의 법정병가수당 환급 제도 연장,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 한시적 확대(1→3년, 최대 2백만파운드) 등의 계획 발표
  -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자영업자소득지원 등 코로나19 지원 패키지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TF)에 1억파운드를 투자

16) 2021년 1월 5일까지 사업장 폐쇄가 필요한 기업은 최대 2백만파운드, 기타 사업장은 최대 105,000파운드 한도

17) 여행 제한 조치 기간 동안 공항 및 지상 조업 관련 고정 비용을 지원

## 2) 공공재정 강화

- 영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되면 정부는 공공 재정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채무 수준을 통제해야 함
  - 이는 정부가 우수한 공공 서비스에 계속 투자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회복력을 유지하며, 기업과 국민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함
- (소득세) 개인 소득세 기본공제액(Income tax personal allowance)과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higher rate threshold)을 FY2021-22 수준으로 2026년 4월까지 유지
  - 당초 계획<sup>18)</sup>대로 FY2021-22의 소득세 기본공제액과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은 물가상승률(CPI)에 맞춰 각각 12,570파운드, 50,270파운드로 인상하지만, 이후 기간부터 2026년 4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
- 기타 개인 조세
  - (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한도를 2020-21년 수준(325,000파운드)으로 2026년 4월까지 유지
  -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연간 면제 금액을 현재 수준(12,300파운드, 개인 기준)으로 2026년 4월까지 유지
  - (국가보험기여금(NIC)) 국가보험기여금(NIC)의 소득 상한기준을 2021-22년 수준(50,270파운드)으로 2026년 4월까지 유지
  - (연금 및 저축 조세) 연금 저축 평생공제액을 2026년 4월까지 현 수준(1,073,100 파운드) 유지, 2021-22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 유지(20,000파운드) 등
- (법인세) 세수 증대 수요와 조세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 유지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법인세 기본 세율을 현행 19%에서 25%로 인상
  - 재무부 장관은 팬데믹 극복을 위해 기업에 약 1,000억파운드 이상의 지원을 제

18) 2018 예산안에서 2021-22년부터 기본공제액과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을 CPI를 반영해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공한바, 이들에게 회복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언급

- 다만 정부는 인상된 세율이 여전히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2023년 4월 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
- 법인세 인상으로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를 합산한 은행 과세가 금융 부문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어 은행특별세 세율(현행 8%)에 대한 검토도 추진
- 수익 25만파운드 이상 기업에 법인세율을 25%로 적용하되 수익 5만파운드 이하 기업(영업 기업의 약 70%)에는 '소기업 세율(Small Profits Rate)'을 신설해 19%의 세율을 적용
- 또한 수익 5만~25만파운드 사이의 기업은 한계 공제(Marginal Relief)를 도입하여 실효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임

□ (부가가치세)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VAT 등록 기준액(85,000파운드)을 2022년 4월부터 추가 2년간 유지

□ (조세회피 대응) 체납 이자·과태료 제도 개선, 매출 관련 전자 기록 위조 대응 등 조세 회피 대응을 위한 신규 조치를 통해 FY2025-26까지 22억파운드 확보

○ 또한 국세청에 IT 시스템, 인력 보강 등 2021-22년에 추가 1억 8천만파운드를 투자하여 2025-26년까지 16억파운드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

### 3)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 정부는 투자 중심의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경영 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기회 제공

○ 고성장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이들 기업이 인재, 아이디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출 기업의 효율적 경쟁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출 전략을 검토할 예정

- 예산안과 함께 새로운 성장 계획('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을 발표하여 역량, 인프라, 혁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

\* 성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에서 요약함

#### □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한 주요 조치

- (신규 투자 공제제도(super-deduction))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플랜트·장비 투자 시<sup>19)</sup> 첫 해에 130%의 자본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
  -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자산<sup>20)</sup>에 대해서는 50%의 공제 혜택 적용
-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 기후변화 및 지역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은행이 민간 및 지방 당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인프라 은행은 120억파운드의 주식·채권 자본(equity and debt capital)을 운영하고 최대 100억파운드의 보증 발행
  -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방 당국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출 제공(국채금리+60bp)
  - 프로젝트 개발·시행 관련 자문 제공

#### □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 (녹색 국채(green gilt)) 탄소 배출 순제로 달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최소 150억파운드 녹색 채권을 올해 여름부터 발행 예정
- (에너지 혁신) 에너지 혁신 관련 지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에 따라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기술 개발, biomass feedstock 프로그램 지원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발표

#### □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

- 'Help to Grow: Digital'을 통해 10만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바우처, 무료 자문 등)

19) 기존 연간 감가공제율(writing down allowance)은 18%임

20) 기존 연간 감가공제율은 6%임

- 'Help to Grow: Management'를 통해 3년간 3만개 중소기업에 경영관리 프로그램 제공(12주간 90%의 보조금 지원)

#### □ 과학 및 기술 혁명 주도

- (코로나19 백신)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의 코로나19 백신 검사 역량 강화, 변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연구 지원
- (Future Fund: Breakthrough) 혁신·R&D 중심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정부-민간 공동 투자 자금인 'Future Fund: Breakthrough'(3억 7,500만파운드 규모) 도입
- (인재 유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 비자 제도 개선, 신규 비자 제도 도입 등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
- R&D 조세 감면 검토 추진

#### □ 지역 균형 발전

- (Levelling Up Fund) Levelling Up Fund에 대한 48억파운드 규모의 투자설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타운 센터 및 변화가 재개발, 지역 교통 프로젝트, 문화·유산 자산 등 영국 전역의 일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 예정
- (City and Growth Deals) 향후 5년간 지역 경제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8,450만파운드의 자금 지원(스코틀랜드 3개, 웨일즈 3개)
- (Towns Fund) 잉글랜드 내 45개 Town Deal을 위해 10억파운드 이상을 확정하였으며 지역 성장 전략 개발·이행,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지역 회복 등 지역의 타운 발전을 지원
- (자유무역항(freepport) 개설) 영국 전역에 자유무역항을 개설해 투자, 무역, 고용 제고
  - 잉글랜드 내 8개소 개설(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해당 행정부와 논의 추진)
  - 자유무역항의 특별 경제 구역에서 조세 감면, 간소화된 세관 혜택, 광범위한 정부 지원을 제공

- 이 외에도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경제 성장을 위한 각종 기금<sup>21)</sup> 지원과 지역 교통 프로젝트 투자 등 제시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예산안의 중기 경제·재정 전략<sup>22)</sup>

- 이번 예산안은 영국 전역에서의 투자 촉진과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며 공공재정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예산책임청이 올해 하반기 경제의 강한 반등을 전망함에 따라 예산안에서 제시된 정책 조치들은 중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함
  - 예산안의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가 회복되면 차입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임
    - 또한 정부는 채무가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저금리 상황의 기회와 리스크 간 균형을 유지하여,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에 두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자본 투자를 위한 차입에 저금리의 이점을 활용함
  - 정부는 자산과 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등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대차 대조표 강화할 것임
- 성장을 위한 투자
  - 투자는 정부 경제·재정 전략의 주요 부분 중 하나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투자가 모두 필요함
  - (공공투자 증대) 정부가 미래 경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영국 전역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투자가 필요함

21) UK Community Renewal Fund, Community Ownership Fund 등

22) 이하 내용은 Budget 2021에 포함된 'Medium-term economic and fiscal strategy'(pp.23~3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정부는 2020 지출검토(Spending Review)에서 FY2021-22에 1,000억파운드의 자본 투자를 발표하였고, 학교, 병원 등 특정 자본 프로그램에 대한 다년도 자금을 배정함
- (중장기 민간투자 지원) 정부는 공공투자 제고뿐만 아니라 중장기 민간 부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음
  - 정부는 역량(skill), 인프라, 혁신 분야 대규모 투자를 위한 경제 계획을 발표하여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설정함
  - 예산안에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됨
    - 중소기업의 디지털·경영관리 향상 지원, 영국 인프라 은행 운영, 혁신·R&D 중심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자금 등 혁신적 고성장 기업을 지원

#### □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 높은 채무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재정의 회복력을 구축해 정부가 가장 필요할 때 가계와 경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함
  - 코로나19 영향과 정부 대응으로 인한 차입과 채무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고 부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현재 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상승 리스크도 존재
  - 경제가 견고하게 회복되면 영국이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 미래의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함
- 정부는 중기적으로 공공재정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수한 공공서비스에 지금 지원을 지속하는 공정한 방법은 최고 소득의 가계가 이에 더 많이 기여하고,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의 보답으로 기여하는 것임
    - 소득세 기본공제액과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을 유지하는 것은 세후 소득 (take home pay)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

- 2023년에 기업 이윤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할 예정
- 예산안은 미래의 조세 변화를 사전에 예고하여 개인과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
- 재정정책은 점진적으로 조정되며 부양적(historically supportive) 기조를 유지
- 예산책임청의 전망에 의하면 예산안에서 제시된 재정 복원 조치로 인해 공공재정 중기 전망이 지속가능한 경로로 돌아올 것임
- 전망기간 동안 공공부문 순투자는 GDP의 2.9% 수준(평균)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상예산적자는 하락해 FY2025-26에 9억파운드를 기록할 전망
-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은 FY2025-26에 GDP의 2.7%로 하락
- 기초 채무는 FY2023-24에 GDP의 97.1%에 도달한 후 남은 전망기간 동안 하락
  - 예산책임청은 기초 채무의 안정화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조치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평가

#### 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 (개요) 2021 예산안과 함께 정부는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프라, 역량, 혁신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새로운 성장 계획을 제시함
-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의 주요 내용<sup>23)</sup>
  - (경제적 배경)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성장 계획은 영국의 강점을 구축하고 약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 일자리는 중요한 경제적 우선순위로 정부는 '일자리 지원 계획(A Plan for Jobs)'을 통해 고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3) HM Treasury,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2021.3.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ild-back-better-our-plan-for-growth>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의 적응력과 회복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술 혁신, 새로운 무역 관계 등 경제 변화로 향후 몇 개월 간 이는 더욱 중요해질 것임
- 정부는 2017년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신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상황임
- 경제성장은 고용과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영국은 고용을 다시 제고하고 생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영국은 다른 국가와의 생산성 격차, 지역 간 생산성 격차,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 속도 둔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중점 투자 분야(three core pillars of growth)) 정부의 이번 성장 계획은 인프라, 역량, 혁신, 세 가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① 인프라(Infrastructure)
    - 통신, 도로, 철도, 도시에 기록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을 추진
    - Levelling Up Fund<sup>24)</sup>, Shared Prosperity Fund<sup>25)</sup>, Towns Fund<sup>26)</sup>, High Street Fund<sup>27)</sup>를 통해 영국 전역의 인프라 투자를 제고
    -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sup>28)</sup> 하에 120억파운드의 자금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 순 제로 달성을 지원
    - 신규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을 통한 투자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진작시켜 탄소 순배출 제로로의 전환과 영국의 균형 발전 지원을 촉진

24) 타운 센터, 변화가 재생, 지역 교통 프로젝트, 문화 유산 등의 인프라에 투자

25) EU 탈퇴 이후 EU의 구조기금을 통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Shared Prosperity Fund를 마련할 예정

26) 영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 재생, 역량 및 중소기업 지원 공간 확보, 지역 교통 및 네트워크 개선 등 타운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

27) 변화가(High Streets)의 재개발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28) 정부는 2020년 11월, 녹색 산업 혁명을 위해 해상 풍력, 수소, 원자력, 전기차, 대중교통·자전거·도보, 무공해 항공기 및 선박, 주택 및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 포집, 자연 환경 보호·복원, 혁신 및 녹색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발표함

- ② 역량(Skills)

- 직업교육(Further Education) 개선에 추가 투자, 기업 수요를 반영한 16세 이상 기술 교육 시스템 개혁 등 양질의 훈련을 통한 생산성 제고 지원
- ‘Lifetime Skills Guarantee’를 도입해 무료로 Level 3 코스를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 지원, 고용주 주도 역량 훈련 제공, ‘Lifelong Loan Entitlement<sup>29)</sup>’ 도입
- 견습제도의 질적 향상, 고용주를 위한 견습제 시스템 개선 등

- ③ 혁신(Innovation)

- 향후 고성장, 지속가능, 안전한 영국 경제를 이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지원·장려
- 고성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금 기금 개선,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지속(British Patient Capital<sup>30)</sup> 프로그램 등), 신규 ‘Future Fund: Breakthrough’<sup>31)</sup> 등 혁신 촉진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시스템 개발
-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제고 및 고성장·혁신 영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규 제도(Help to Grow: Management<sup>32)</sup>, Help to Grow: Digital<sup>33)</sup>)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정부는 국민의 우선순위(영국 전역의 균형 발전, ‘Net Zero’ 사회로 전환, ‘Global Britain’ 비전 지원)를 달성하도록 성장을 추진할 예정

- ① 영국 전역의 균형 발전(Level up the whole of the UK)

---

29)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편해 2025년부터 고등 기술 과정에 대해 대학 학위 과정 대출과 동등한 대출을 제공

30)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성장과 글로벌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31)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장 혁신 기업에 민간 투자자들이 정부와 공동 투자를 하도록 장려

32) 영국 전역의 중소기업에 경영대학원의 커리큘럼과 사례 연구, 멘토링 등 경영관리 프로그램 제공

33) 중소기업이 생산성 제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시간·비용을 절감하도록 소프트웨어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료 자문도 제공

- 지역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재생 지원
  - 모든 지역(region and nation)에 하나 이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든다는 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City and Growth Deals<sup>34)</sup>, 시내·도시 교통 인프라 투자 지속
  - 디지털·교통 연결성 제고, 잉글랜드 북부에 인프라 은행 설립, 공무원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영국 전역에서 일자리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에 자유무역항을 개설하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간 해상, 항공, 지상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하는 등 연합(Union)을 강화
- ② 탄소 순배출 제로 사회로의 전환(Support the transition to Net Zero)
- Net Zero 분야에 투자하여 경제성장 및 일자리 기회 창출(해상 풍력 부문 6만개, 탄소 포집·사용·저장 분야 5만개, 산업 클러스터 내 수소 분야 8,000개 등 일자리 지원)
  - 현재의 Net Zero 산업을 성장시키고 신규 Net Zero 산업을 장려(업계와 협력, 저탄소 수소 생산 용량 5GW 목표, 탄소 포집·저장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10Mt의 탄소 포집, 2030년에 신규 가솔린·디젤 자동차 판매 종료)
- ③ ‘Global Britain’ 비전 지원(Support our vision for Global Britain)
- G7, COP26 등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우선순위 문제의 국제적 이행 제고
  - 자유·공정 무역 관련 룰 모델 확대(다자간 시스템 및 WTO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특혜 협정과 양자 무역 협정을 활용해 영국 기업의 교역 기회 확대)
  - 성장 계획 및 분야별 우선순위와 수출기업 지원을 연계한 신규 수출 전략 개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무역 허브 개설, 영국 수출금융청(UK Export Finance)의 대출 여력 확대 등

#### 다. 재정준칙<sup>35)</sup>

34) 지역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도시와 계약을 체결함. 고용, 기업 지원, 주택, 교통, 투자 등에 대해 각 도시에 유연성과 권한을 부여

35)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pp.173-179.

## 1) 현행 재정준칙과 개정 추진 경과

### □ 현행 재정준칙(법제화된 재정준칙)

- 현재 유효한 재정준칙은 ‘예산책임헌장-2016년 가을 업데이트<sup>36)</sup>’를 바탕으로 함
  - (Fiscal Policy Objective) 다음 의회 회기에 최대한 빨리 공공재정 균형을 달성
  - (Fiscal Mandate) GDP 대비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을 FY2020-21까지 2% 미만으로 감축
  - (Supplementary Target)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FY2020~21에 하락
  - (Welfare Cap) FY2021-22의 복지지출이 재무부가 2016 Autumn Statement에서 사전에 정한 한도와 마진을 하회(예산책임헌장 2016 업데이트 기준)
    - \* 재무부는 새 의회 회기의 첫 재정 행사(또는 이전)에 복지지출 한도 수준과 경로, 적용 연도를 설정하며, 최근에는 2020 예산안에서 신규 복지지출 한도를 설정함
- 현행 재정준칙(Fiscal Mandate과 Supplementary Target)은 2021년 3월 말에 만료되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대체할 재정 목표를 결정하지 않음<sup>37)</sup>

### □ 재정준칙 개정 계획

- (최근 경과) 정부는 2020 예산안에서 신규 재정준칙(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추가 검토 후 2020년 가을에 새로운 예산책임헌장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2020 예산안의 재정준칙(안)은 새로운 경상예산 기준, 공공부문 순투자 기준,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기준<sup>38)</sup>을 포함

---

HM Treasury,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autumn 2016 update*, 2017.1.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36)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autumn 2016 update

37)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p.176.

38) 경상예산은 5년 전망기간 중 세 번째 연도까지 적어도 균형을 달성.

공공부문 순투자의 5년 전망기간 평균이 GDP 대비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이 6%를 계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정부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감축하도록 조치 마련.

- (2021 예산안의 계획) 정부는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며 향후에 불확실성이 더욱 완화되면 연말쯤 신규 재정준칙을 제시할 예정임을 밝힘
  - 2021 예산안에서 '현재의 불확실성 수준은 새로운 중기 재정준칙을 설정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님을 의미하며 많은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함

## 2) 정부 재정 목표(fiscal target)에 대한 성과 분석<sup>39)</sup>

□ (현행 재정준칙 기준) 예산책임청은 현재 유효한 재정준칙의 모든 기준들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표 6> 참고)

\* 예산책임청은 현 정책 하에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달성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FY2020-21의 GDP 대비 경기조정 순차입 비율이 16.5%로 2% 기준을 상회하며 공공부문 순채무도 GDP 대비 15.8% 늘어날 전망
- FY2025-26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2021년 3월 전망 기준으로 2.8% 적자가 예상되나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세 증가의 영향으로 2020년 11월 전망(3.9%)보다 목표와의 마진(차이)은 감소

<표 6> 예산책임청의 재정준칙 달성 여부 평가(2021년 3월 전망 기준)

(단위: GDP 대비 %, 십억파운드)

구분	예산책임청의 분석 기준	전망	마진	달성 여부
Fiscal Policy Objective	FY2025-26 <sup>2)</sup> 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	2.8	-2.8	X
Fiscal Mandate	FY2020-21의 GDP 대비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 비율(%)	16.5	-14.5	X
Supplementary Target	FY2020-21의 전년 대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 변화(%)	15.8	-15.8	X
Welfare Cap	FY2024-25의 복지지출 금액(십억파운드)	127.9	-3.1	X

주. 1. 2021년 3월 전망 기준임

2. 예산책임청은 예산책임현장의 '다음 의회 회기를 FY2025-26으로 해석하여 분석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4.1, 일부 발췌

39)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pp.173-179.

- (2021 및 2020 예산안에 제시된 재정총량 목표 분석) 예산책임청은 경상예산적자, 기초 순채무, 채무이자, 공공부문 순투자의 지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기준선 전망과 비교해 2021 예산안이 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함
  - (분석 대상) 네 가지 재정총량 지표
    - 아직 공식 재정 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산책임청은 재무부 장관이 중기에 경상예산을 거의 균형으로, 공공부문 기초(underlying) 순채무를 안정화하도록 예산안 결정을 조정(calibrate)했다고 언급<sup>40)</sup>
    - 이 외에도 2020 예산안의 재정준칙(안)은 GDP 대비 공공부문 순투자의 한도(3%)와 세입 대비 채무 이자 비율 한도(6%)를 포함하고 있음
  - (분석 결과) 2021 예산안에서 발표된 중기의 조세 인상과 지출 계획 감축은 FY2025-26에 경상예산적자를 줄이고 공공부문 기초 순채무가 전년 대비 하락하도록 하는 데 충분함(<표 7> 참고)
    - (경상예산적자) 예산안의 정책 조치가 없다면 GDP 대비 경상예산적자 비율은 1.4%로 예상되나, 예산안의 중기 조세 인상과 지출 감축으로 경상적자는 이에 비해 362억파운드 감소한 9억파운드(GDP의 0.03%)로 전망됨
    - (기초 순채무) GDP 대비 기초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은 FY2023-24까지 계속 상승하고 이후 FY2024-25와 FY2025-26에 소폭 감소
    - (채무이자)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은 전망기간 동안 6% 기준보다 낮게 유지
    - (공공부문 순투자) 이번 예산안에서 중기 자본 지출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순투자는 GDP의 3% 아래로 유지

40) 2020 예산안의 재정준칙(안)과 비교해 경상예산적자 기준의 경우 지표는 유지되지만 전망기간 중 세 번째 연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와는 차이가 있고, 채무 기준은 headline 순채무(중앙은행의 영향 포함)에서 기초 순채무(중앙은행의 불규칙한 영향 제외)로 초점이 이동

<표 7> 주요 목표 재정 지표

(단위: GDP대비 %, %)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경상예산 적자	'21.3. 기준선 전망	0.6	13.1	5.3	1.7	1.4	1.4	1.4
	'21.3. 전망	0.6	13.3	7.6	1.7	0.6	0.1	0.0*
기초 순채무 변화	'21.3. 기준선 전망	4.2	12.7	2.9	2.2	1.7	1.2	1.2
	'21.3. 전망	4.2	12.7	5.1	2.2	1.1	-0.0	-0.2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21.3. 기준선 전망	3.5	2.6	2.4	2.2	2.4	2.5	2.6
	'21.3. 전망	3.5	2.6	2.5	2.3	2.4	2.5	2.5
공공부문 순투자	'21.3. 기준선 전망	1.9	3.5	2.7	2.8	2.9	2.8	2.8
	'21.3. 전망	1.9	3.6	2.7	2.8	2.9	2.8	2.7

주: 1. 기준선 전망은 예산안 조치를 반영하기 전의 기준임

2. 기초 순채무 변화는 공공부문 기초 순채무(중앙은행 영향 제외)의 전년 대비 변화를 의미

3. 별표(\*)의 경상예산적자 규모는 9억파운드임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4.3에서 일부 발췌